

“대학 시설이 초중고만도 못해”

에스프레소



이 동 수

청년정치쿠루 대표

2008년 대학에 입학하고 맞닥뜨린 가장 큰 난관은 등록금이었습니다. 한 학기에 320만원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국가장학금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 최저시급 3770원짜리 아르바이트로 그 돈을 충당한다는 건 어렵없는 일이었다.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연 6% 정도 되는 이자로 대출받아 등록금을 냈다. 5년 선배가 “내가 입학할 때만 해도 200만원대 초반이었는데 그사이 어떻게 이렇게 오르느냐”며 혀를 내두른 모습은 지금도 있을 수 없다. 우리 학교만 그랬던 게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사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63.5%, 국립대는 무려 90.1%에 달했다.

에는 매년 70만명 이상이 태어났다. 그렇게 N수생 포함 한 해 60만명 안팎이 수능에 응시했다. 사람 수가 많은데 대학 진학 수도 높았으니 각 대학이 배짱 장사하듯 등록금을 올렸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해마다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학생들을 지원하는 한편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등록금 인상을 위한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거나 고

서강대 13년 만의 등록금 인상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포퓰리즘’ 제대로 된 교육의 질 보장하고 고졸·대졸 일자리 격차 줄여야

내 장학금을 유지·확충하는 학교에만 국가장학금(II 유형)을 지원했다. 사실상 등록금을 올리지 말라는 거였다.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기에 정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었던 건 적절했다고 본다. 하지만 뒤늦은 과잉불급인 법이다. 강한 규제로 15년 이상 흐른 지금도 대학 등록금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 사이 최저시급은 3배 가까이 올랐다. 지난 3일 서강대학교가 13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발표할 건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다. 서강대 관계자는 “학교 시설이 초·중·고등학교만도 못해 학생들에게 초라한 느낌을 주고 있

는 실정”이라고 했다. 어디 시설뿐인가. 2010년대 대학들은 등록금 부족분을 메우려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거 유치했다. 말도 잘 안 통하는 유학생들을 우리나라 학생들과 한데 묶어놓았다. 조별 과제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졌다. 2030 세대의 강한 반증 정서는 그 경험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등록금 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AI 분야 연구 인력을 죄다 미국으로 빼앗기고 있는 유럽 대학들의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니다. “초중고만도 못한 시설”로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경쟁하는 건 불가능하다. 등록금 인상을 허용할 때 일어날 반발이 두렵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서라도 억누르는 게 과연 학생들을 위한 건지 잘 모르겠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3년 12월, 등록금 동결이 시작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사립대학의 연구비(-18.0%), 실험 실습비(-26.1%), 도서 구입비(-25.5%) 등이 대폭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청년들이 등록금 인상에 분노하는 근원에는 대졸자와 고졸자 간 극심한 임금 격차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얻으려면 대학 진학이 필수이니 다들 등록금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면 대학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격차를 줄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불만 누그러뜨리려고 저 등록금 인상을 통제하고 국가 장학금으로 달래는 건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우정의 아트 스토리 [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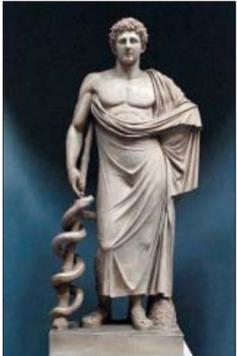
아스클레피오스

아스클레피오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의술의 신이다. 태양신 아폴로가 코로니스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코로니스가 아폴로의 아이를 잉태한 채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다고 오해하는 바람에 그녀를 죽여 버렸다. 아스클레피오스는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아폴로가 장작 더미에 던져진 코로니스의 몸에서 급히 꺼내 살린 그의 아들이다. 신화에 따르면 아스클레피오스는 현명한 켄타우로스 아래서 성장하면서 의술을 배웠는데, 그 재주가 어찌나 뛰어났던지 죽은 사람조차 여럿 살려냈다고 한다. 하지만 죽은 이를 살린 탓에 신들의 노여움을 산 아스클레피오스는 제우스의 번개에 맞아 죽고 말았다.

인간이던 그를 신으로 받들어 모신 건 병 들고 죽어가는 인간이었다. 고대 그리스에 이어 로마 제국에서도 아스클레피오스 신앙이 크게 번졌는데 그 덕에 현재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에만 아스클레피오스의 크고 작은 신상이 꽤 많다. 사진에서 보이는 상은 기원전 4세기 그리스 대리석상을 모방해 기원후 2세기경 로마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알려

져 있다. 로마 전역에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는 환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신전에서 잠을 자면 아스클레피오스가 꿈에 나타나 치료법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아스클레피오스는 항상 뱀이 파리를 쫓는 지팡이를 들고 있다. 다시 태어나듯 허물을 벗는 뱀은 고대부터 치유의 약초를 찾아내는 현명함과 재생의 힘을 가진 상스러운 존재였던 것. 세계 보건기구(WHO)의 로고에서도 바로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 참담한 사건 사고와 함께 찾아 온 2025 을사년에 뱀의 지혜와 기적 같은 치유의 힘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작자 미상,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2세기경, 대리석, 로마 바티칸 박물관 소장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 說

여야·국가기관 잇따른 법 무시, 이렇다 헌법 위기 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여야와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거나 법 절차를 어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이 위헌, 위법이라며 바로잡겠다고 나선 국회와 수사기관,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와 자의적 판단으로 움직이면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 사태가 이대로 마구 굴러가면 그 끝이 무엇일지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막히자 돌연 경찰에 집행을 떠났다. 수사권은 놔두고 영장 집행만 하청 주듯 남기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일로 법적 문제가 있다. 경찰이 거부하자 결국 철회했다. 영장을 들고 폭탄 돌리기를 하나.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검경과 경쟁하며 수사에 나선 일부터 법을 경시하고 무시한 것이다.

공수처가 서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영장 판사와 미리 짜는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 실제 이 판사는 제 맘대로 ‘군사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판사가 무슨 권한으로 법 적용을 마나. 계엄과 같은 초법적 발상이다. 윤 대통령이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고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도 큰 문제다. 어쨌든 발부된 영장은 집행돼야 한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법 집행을 막았다.

가장 엄정해야 할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사무처장과 공보관은 재판관들의 공식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정족수 논란이 있지만 직무 정지 효력이 유지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재판관들의 결정 사항인가. 그렇다면 결정 과정을 밝혀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행을 탄핵 소추하면서 ‘151석이 정족수’라고 마음대로 결정했다. 만약 한 대행 탄핵이 기각되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치적 정당성 문제가 지 번질 수 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것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내란죄를 탄핵의 핵심 이유로 삼아 왔다. 한 총리도 ‘내란 동조자’라며 탄핵했고, 다른 사람들도 ‘내란범’이라며 탄핵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을 빼고도 한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을 마무리하겠다는 속도전 의도라지만 현재 재판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는 일이다.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가 앞장서 법을 무시하거나 어기고 있다. 그 결과가 불법 시위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통령 관저 일대의 상황이다. 이렇듯 탄핵이 인용되면 기각되던 많은 국민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헌법, 헌정의 위기가 올 수 있다. 모두 자제해야 한다.

최 대행대행과 공수처장까지 탄핵·고발 위협, 어찌자는 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최상목 대행의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행이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대행 탄핵에 이어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오동은 공수처장까지 “탄핵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고발하고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는 이유로 탄핵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탄핵 얘기는 잦아들었지만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다시 최 대행을 고발하고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계엄 이후 한국 정치와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대행

의 대행 체제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그런데 대행의 대행까지 고발하고 탄핵하면 어떻게 되겠나.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공수처장까지 탄핵하면 이 사태가 어디로 가겠나.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이런 마구잡이 행태를 보이는지 알 수 없다.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한 대행 체제로 넘어가면서 그래도 한국의 헌법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국제사회에 주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너무 쉽게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각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선을 치르는 문제에만 혈안이 돼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라는 칼을 빼 들고 자신들 정권 쟁취에 방해되면 다 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도를 넘는 행태는 언젠가 역풍을 맞게 된다.

헌재, 한덕수 대행 사건부터 서두를 필요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 심리를 13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국회 3분의 2가 아닌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인 과반으로 가결한 것이 유효한지, 탄핵 소추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한 대행 탄핵소추 관련 현재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 대행의 탄핵 소추 정족수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과거 전례도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과반 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했다. 지금은 최상목 대통령 ‘대행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위협하고 있다. 한 대행처럼 재직 과반만으로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면 ‘대행 대행 대행’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탄핵소추가 쉬운 나라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한 대행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현재 이뤄지는 각종 행정 행위의 정당성도 불안정한 상태로 남게 된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내란 공모’를 들었

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한 총리를 부르면서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빨리 들어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한 대행은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란’ 관련 혐의를 씌웠다. 그런 민주당은 정작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한 대행 탄핵소추 근거는 어떻게 되나. 민주당이 한 대행을 탄핵소추한 실제 이유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윤 대통령 탄핵 속전속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와 안보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압박한 가운데 환율은 요동치고 국가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은 6일 극초음속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쏘았다. 국정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현재는 한 대행 탄핵소추 관련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

《자유 세계》 VS 《북중러 전체주의》

대통령 관저 앞 처절한 투쟁, 윤석열 개인 문제 아냐... 《체제 전쟁》이다

newdaily.co.kr 뉴데일리

대통령 오만·실수 따위 따질 때 아냐
지연 그날 북중러, 특히 중국공산당 손아귀 속
대통령 지지 40%대 회복, 2030도 돌아와
본격 싸움, 이제부터



친북·중·러 민노총, 대통령 관저 공격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노리는 민노총 돌격부대! 자유 시민들, 2030의 비장한 반격! 이들의 함성이 하늘을 찌른다.

★(탄핵) 무효! ★(국정 마비) 분쇄! ★(공수처+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체포! 지지! ★(탄핵 언론) 규탄! ★(최상목 '헌재 재판관 2명 임명') 규탄! ★(국민의힘 투항) 말라! ★(조기 대선+내각제 개헌) 반대!

한파 대설 속 극좌와 처절하게 맞서다

《대한민국 애국 국민/시민의 이 투쟁》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극좌+기회주의》 정파와 언론들의 ‘쿠데타’에 항거! 하는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non-violent civil disobedience)》이다.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은 1849년, 흑인 노예제에 반대했던 미국 사회운동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가 시범했다.

레오 톨스토이,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엘리스 폴(미국 여성참정권 운동가), 에니스트 헤밍웨이, 윌리엄 에이크, 싱클레어 루이스 등이 이를 계승했다. 대표적인 사례.

★ 간디의 사티아그라하(satyagraha) 운동. 인도인들의 소금 생산을 금지한 영국 식민통치의 약법에 항의한 행진
★ 미국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백 분리 정책에 대한 저항
★ 여성차별에 항의한 영국 여성 정치사회 동맹(WSPU)의 투쟁
★ 남아 연방의 인종 분리(apartheid) 법에 대한 넬슨 만델라의 불복종
★ 푸른 폭정에 저항한 펄크 록 밴드 푸시 라이엇(Pussy Riot)의 반항
★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소

속 에드워드 스노든의 ‘정치사찰 기밀문서’ 폭로 ★ 허잡 착용을 거부한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수난



무엇을 위한 싸움?

그렇다면 《자유 한국인들의 ‘불복종 운동’의 특징》은?

《투쟁 대상이 ‘구(舊) 보수’가 아니라 ‘극좌+기회주의’ 득권이란 점》이다. (1989년의 ‘소련+동유럽’에 대한 자유인들의 투쟁 같은 것이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주류는 ‘자유 민주 공화 공정의’ 흐름》이었다. 이 운동들 《NL 주사파》가 가로챘다. 《자들은 ‘까지마 한탕 길로’ ‘민중 혁명’을 완성하려》한다. 국제적으로 《신판 중화 패권주의》의 업습이다.

누가 이 싸움 《윤석열 개인 문제》로 축소?

자유인들은 이에 온몸으로 저항한다. 그리고 외친다.

- ① 윤석열 대통령 불법 탄핵 재의결하러!
- ②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원천무효!
- ③ 헌재(憲裁), 졸속 재판 말라!
- ④ 국민의힘, 제대로 싸워라!
- ⑤ 박종준 경호처장 파임!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40%를 넘어섰다(한국여론평판연구소 KOPRA). 2030도 돌아왔다.

《싸움은 이제부터》다!

! 류근 일

뉴데일리 논설교수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1월 4일 게재 되었습니다.

